

Global 경제 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

사공 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엇보다 한국경제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2012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첫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하성근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만우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얼마 전에 하성근 전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global 경제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금년 Davos World Economic Forum의 분위기와 주 논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한국경제의 진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미리 text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Swiss 산골 조그마한 스키 리조트인 Davos에서는 World Economic Forum이 열립니다. 주요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시한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주요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IMF, 세계은행, OECD, WTO, IL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과 기업 지도자들, 세계적 논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해 지구촌의 관심사 특히 경제 관련 주요 정책 이슈들을 논의하고, 의견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Davos Forum의 main theme은 “the Great Transformation”(대전환) 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public debate는 “capitalism”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Capitalism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

* 본 원고는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2. 2. 21(화), 연세대학교 대우관 본관 지하 1층 각당현), 제1전제회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에서 발표한 기조연설 내용을 정리한 것임.

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동안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capitalism in crisis”란 제하에 article을 연재해 오고 있으며, 2010년에 출판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던 Anantole Kaletsky의 “Capitalism 4.0”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펼쳐지게 되었나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과거와 달리 왜 금년에는 Davos에서 단기적인 세계경제전망이나 경기진단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는가를 간략하게 한 번 생각해 보지요

Davos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IMF를 위시한 세계적 경제 예측 기관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세계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해 왔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유로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잘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유로존의 문제는 fiscal union이 없는 currency union으로서의 근원적 요인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정치 통합이 이룩되지 않은 약한 governance 체제하에서 주요 유로존 국가의 강력한 정치 leadership 마저 없는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인 위기대응책 마련마저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 효과 또한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정책 대응이 항상 too little, too late 이었음) 그 결과 유로존과 EU 전체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double-dip recession 가능성마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존하는 Greece default 가능성은 유로존 경제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전망에 그나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는 최근 들어 미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 또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미국 가구의 불가피한 deleveraging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미국 경제의 robust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단지 중국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과 남미 여러 나라 경제는 선진국 경제에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성장세가 줄어들 것이긴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고성장세는 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세계 경제 전체의 double-dip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Davos에서도 금년도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좀 더 어려울 것이란 중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세계경제의 단기 전망 그 자체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화두가 되고, 심각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지요. 이 논의 자체가 오늘 이 세션의 주제인 “한국경제의 진로”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Lawrence Summers가 Financial Times에 연재하고 있는 “capitalism in crisis” series의 한 column에서 “불과 5년 전만해도 Financial Times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 관한 글들을 연재하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현 미국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Ben Bernanke를 필두로 다수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2008년 9월 Lehman Brothers의 붕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소위 “the Great Moderation” 시대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The business cycle is dead”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태평성대를 맞은 것 같던 자본주의 체제가 2008년 9월 Lehman Brothers 붕괴를 기점으로 큰 체제적 도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작년에는 George Mason 대학의 Tyler Cowen이 쓴 The Great Stagnation 이란 책이 New York Times best seller에 오르게 되는 현상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실제 2008년 당시 세계경제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상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Barry Eichengreen과 Kevin O’Rourke 등이 보여준 바와 같이 세계의 산업생산, 교역량, 주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유지격인 G20 국가의 정상들이 1930년대의 교훈을 되살려 국제 공조를 통해 protectionism을 피하고 강력한 Keynesian적 거시경제정책을 함께 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소위 Great Recession은 피할 수 없었지만 또 다른 Great Depression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 EU 제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경제는 높은 실업과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일부 recovery마저도 소위 jobless recovery에 그쳤지요.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배 악화 문제가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보완책, 나아가 정부와 시장간 역할의 새로운 조화 등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히 거론되고 있고, Davos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2008년 Lehman Brothers 붕괴 이후 지금까지 소위 영·미식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에 관한 시각은 이미 크게 달라져 왔고 특히 Alan Greenspan류의 “금융시장의 자율규제능력”에 대한 신뢰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20을 중심으로 Basel III와 체제적으로 주요한 금융기관(SIFS’s)에 대한 규제 등 각종 새로운 금융 규제가 이미 도입되었고,

일부 파생상품시장(derivative market)에 대한 규제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과거 Glass-Steagall 보다는 낮은 수준의 소위 Volcker Rule이 도입되었지요. 또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Tobin Tax와 유사한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G20과 함께 IMF마저 소위 거시경제 안정적 금융규제(macro-prudential financial regulation)란 차원에서 일부 capital control도 조건부 허용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상당한 변화와 함께 최근 들어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속되는 고실업과 경기침체 속에서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가 사회·정치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서 심각한 논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부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 중 50% 정도만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40% 정도의 국민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 층의 실망이 더욱 크며, 소득 3만 불 이하 상대적 저소득 계층의 실망이 더욱 크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경제 사정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일부 불신은 계속 악화되어온 소득 분배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심리적 균형”(psychological equilibrium)을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Occupy Wall Street, Occupy London 시위와 같은 사회·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금년 Davos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Financial Times series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득 분배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식기반경제시대(knowledge-based economic era)와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역작용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먼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교육수준의 고하와 전문성 및 기술력의 고하간의 임금격차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 격차 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현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out-sourcing과 global supply chain의 확산 등 세계화 추세의 가속화에 따라 국내에서는 교육수준과 전문성이 낮은 근로계층의 실업문제가 고질화 될 수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이 일자리

를 찾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낮아 임금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Summe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비교역 서비스(non-traded service) 부분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에 따른 가격상승이 이들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건·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 경쟁도입과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금번 Davos에서는 이 소득 분배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개혁, 근로자들의 평생 교육과 훈련·재훈련 제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아울러 민·관 협력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민간부분 특히 기업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율적인 동반성장의 노력이 기업차원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높은 실업입니다. 금번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은 곧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룩되어도 일자리 창출이 미미한 소위 jobless recovery가 될 뿐 아니라, 특히 저학력 근로 계층과 청년실업이 더욱 구조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Davos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지속(sustainability)을 위해 이제부터는 “고용이 강조되는 성장”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입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과 근로자 훈련제도 강화와 함께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육성,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 강화 등이 주로 논의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어쨌든 지금까지 Financial Times의 “capitalism in crisis”series에서나 Davos에서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혹은 authoritarian capitalism 등을 현재의 시장자본주의(market-based capitalism) 혹은 democratic capitalism의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에 관한 논의 보다는 자본주의의 체제 지속을 위한 보완책과 정부와 시장의 역할 조정에 논의의 초점이 모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측면에서 오늘날 미국 등 선진제국이 당면한 문제를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Tyler Cowen은 The Greatest Stagnation이란 저서를 통해 지금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즉 대침체(great stagnation)를 겪고 있는 이유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고, 미국이 지난 40여년간 “따먹기 쉬운 과일”(low-hanging fruit)을 따먹으면서 잘 지내 왔는데, 이제 따먹기 쉬운 과

일이 거의 소진되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인들은 아직도 과거와 같은 좋은 시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미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충족될 수 없음을 인정·설득하는 대신 오히려 그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 낭 국민을 호도·기만해온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정부나 가계가 수입의 한계를 걱정하지 않고 쉽게 빌려 쉽게 쓴 것이 오늘 미국 경제 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 왔다고 보는 것이지요. 게다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느슨한 규제·감독 체제하에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러한 정부와 가계의 씹씹이를 더욱 부채질해 왔지요. 오늘날 그리스 등 유로존의 문제도 결국 그 동안 이들 정부와 국민들이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을 탐닉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촌의 자본주의 체제적 고민과 장기침체의 고민을 우리는 과연 외면 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분배, 실업, 재정상화와 경상수지 등의 측면에서는 이들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잘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일부 사회·정치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다. 그런데 현재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은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중구난방식의 인기 영합적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Cowen의 “따먹기 쉬운 과일” 논리를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 여건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우리 경제 자체의 내용과 세계 속의 위상이 달라져 그 동안 우리가 향유해 온 “따먹기 쉬운 과일”의 상당부분이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GATT-Bretton Woods 체제가 사라졌으며, 이제 우리는 세계 9대 교역대국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과거와 같은 catch-up의 이점이나 개발도상국 내지 신흥경제국으로서의 일부 이점도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우리 능력 이상의 높은 국민적 기대치를 우리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각종 복지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게 내놓는 공약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만을 짚어 보기로 하지요.

무엇보다 현재 우리는 그 동안 follower nation(후발개도국)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던 low-hanging fruit를 거의 소진한 상황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낮아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적극 제고하는 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과거처럼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의 양적 증대를 통해 향상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는 남아있으나, 이제부터는 노동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맞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국제경쟁에 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식이 가장 전략적 자원인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개혁에 국정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평생교육과 훈련·재훈련 제도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기업 투자여건을 다른 나라와 지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현재 생산성은 낮으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여 보건·의료, 관광, 컨벤션 등 MICE 산업, 물류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경제체제 전반의 효율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많은 산업분야에서 technological catch-up 단계를 지나 technological leader로서 원천적 innovation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R&D 지출은 높은 편이지만,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 등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는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온갖 사회적 거래비용(social transaction cost)을 줄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 법과 제도의 투명화와 선진화, 그리고 철저한 집행도 강조되어야 하며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펼쳐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경제의 근본체질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역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G9이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역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작년 3.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주종 품목인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30~50%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종 품목 위주의 양적 수출 증대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수출의 구조는 10대 주종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수출의 80% 이상이 대기업이 직접 수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출의 취업 유발효과가 계속 떨어져 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과 대기업이 생산하는 수출 품목에만 의존하여 우리의 수출을 크게 늘려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함께 해야 할 일로 우리 능력에 맞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고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빼놓을 수 없지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기반경제시대와 세계화시대 특성상 소득분배악화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끝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적극적 leadership을 발휘 하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버려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농업구조조정은 한·중 FTA와 관계 없이 추진해야 할 사안이며 향후 기후 및 환경 변화에도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리더쉽 발휘 소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면서 지구촌 전체를 위한 적절한 leadership도 발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